

소각장, 무엇이 문제인가?



김은경

쓰레기 문제가 세간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난지도에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릴 수 없게 되어 김포에 새로 매립지를 마련하면서 부터이다. 김포 주민들의 매립장 설치 반대, 많은 요구조건을 내건 협상, 매립장 반입 쓰레기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반입 거부, 요구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때마다 보인다 집단 행동 등으로 그 심각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오랜 협상과정에서 적잖게 예를 먹었던 당국은 매립에 대한 대안으로 소각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2000년대 서울시 쓰레기 전량 소각이라는 웅대한 소각장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각 지역에 소각장 건설을 강행하기에 이르렀다.

그 첫번째 건설 예정지였던 노원구 상계동에서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강경한 반대로 8개월여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다가 지난 8월 30일 공권력을 동원해 주민들을 차단한 채 기공식을 가졌다.

그러나 주민들의 소각장 건설 반대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그 반대 참여의 범위가 더욱 확산되고 있고, 그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던 환경 단체의 전문가들이 소각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섬으로 해서 앞으로 소각장 건설의 논의는 확대·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각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첫째, 매립장 문제가 심각해지자 그 대안으로 소각장 건설계획이 제시되었지만 소각은 매립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

전체 쓰레기의 14%를 소각하는 경우 절약되는 매립지는 10% 정도이다. 다시 말해서 몇 조의 예산을 들여 소각장을 지어도 전체 쓰레기의 90%는 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먼지·해충·악취 등의 문제가 심각

하기는 하지만 소각장은 그에 비해 안전한
가 하면 그 또한 아니다. 온갖 알 수 없는
화학 합성물과 중금속으로 오염된 재가 악
취나 해충에 비해 낫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결국 소각재의 처리라는 또 하나의 짐을
진 채 매립지 부족은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80%가까운 소각률을 보이
는 일본 역시 매립지난을 겪고 있다는 것으
로 충분한 설명이 될 것이다.

둘째, 소각장이 현 상태에서 건설되면 재
활용이 될 수 없다. 처리 쓰레기의 양을 줄
이는 것 외에 자원 절약, 환경보호의 측면
에서도 재활용의 필요성은 외면할 수 없다.

그러나 소각장이 건설되면 종이·플라스
틱 등 잘타는 쓰레기를 태워야 소각장이 가
동되고 지역 난방과 온수가 공급될 수 있다.
따라서 관에서 재활용을 적극 추진·지원

할 리가 없고 재정적으로 막대한 소각장 건
설 비용에 이은 추가 부담으로 재활용을 충
분히 지원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소각장 건설 후에 음식찌꺼기의 퇴
비화를 포함한 포괄적인 재활용이 실행되
면 소각장은 태울 쓰레기가 없어 문을 닫거
나 아주 낮은 가동률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일본 전체의 재활용률이 4.5%로 의외로
낮은 원인을 소각 정책에 두고 있는 사실이
나 미국 뉴저지 바렌지구에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법을 시행하자 소각장이 적자를 내
게 되어 지역사회에서 소각장 건설·운영
자의 손실을 배상해 주었던 사례는 재활용
체계가 구축되기 전에 소각장을 짓는 것이
재활용에 명백한 방해가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세째, 소각장의 건설은 쓰레기 양의 증가
를 막지 못한다.

소각장이 건설되면 쓰레기를 버리는 국



소각장이 건설되면
종이·플라스틱 등
잘타는 쓰레기를
태워야 소각장이
가동되고, 지역난방과
온수가 공급될 수
있어, 자원 재활용이
불가능해진다.

민이나 처리를 하는 공무원이나 태워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에 무신경해진다. 현재 당국이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반대를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 마치 소각장을 짓기만 하면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하여, 버리는 사람의 무책임과 이기주의를 은폐·조장하고 있는데 이는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가로 막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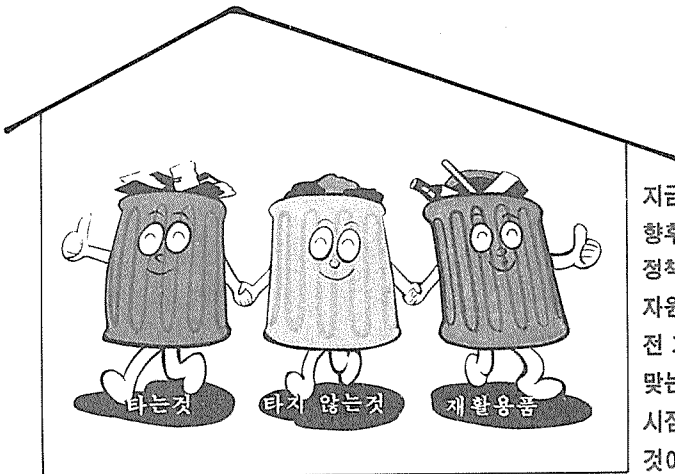
20년 이상 소각장을 건설해 왔지만 멈추지 않는 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아직도 계속해서 소각장을 짓고 있는 일본이 그 원인을 소각 정책 때문이라고 보아 ‘탈소각’을 외치고 있는 점이나, 소각을 금지시킨 캐나다 온타리오 주 환경장관의 ‘소각은 쓰레기를 모두 태워 없앨 수 있다는 환상을 준다’는 지적은 되새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네째, 소각은 비싸고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소각은 재활용에 비해 10배 이상의 비용이 든다. 반면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다. 당국은 소각장을 “자원(에너지)회수 시설”이라 부르지만 종이를 재활용하면 소각에 비해 5배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폴리에틸렌 용기를 재활용하면 2배의 에너지를, 그대로 재 사용하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상계동 지역의 난방·온수를 쓰레기를 소각해서 나온 열로 충당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겨울철 난방·온수의 9%정도를 폐열로 충당할 뿐이고 나머지는 LNG를 때는 별도의 보일러를 가동해서 충당한다. 당국이 애용하는 “자원회수시설”이라는 이름은 별로 적절한 이름이 아니다.

이러한 소각정책 자체의 문제 이외에도 우리나라 쓰레기처리 정책이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고, 모든 대안에



지금 우리는,
향후 우리나라 쓰레기
정책 전반을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라는
전 지구적 요구에
맞는 길로 이끌어 가야할
시점에 서 있는
것이다.

“

주민과 환경문제
전문가들의 주장은, 현재 진행
중인 소각장 건설을 2년정도 유보하고,
시민·환경전문가·청소 행정 당국이 포함된
쓰레기 처리 시민 대책회의”를 구성해서 쓰레기
정책 전반에 걸쳐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친
후에 쓰레기발생 억제·재활용·소각 등의
쓰레기 처리 원칙과 구체적 방법을
정하자는 것이다.

”

대한 고른 연구·투자를 거쳐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쓰레기 처리의 기본원칙이 무시되고, 소각정책이 전체 쓰레기 처리 정책과 조화·통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주민들과 환경문제 전문가들의 주장은, 이러한 소각방법이 가진 문제점이나 쓰레기 처리 정책의 문제를 해소·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각장 건설을 2년 정도 유보하고, 시민·환경전문가·청소행정당국이 포함된 ‘쓰레기 처리 시민 대책회의’를 구성해서 쓰레기 처리 정책 전반에 걸쳐 충분한 연구·검토를 한 후 쓰레기 처리 원칙에 맞추어 발생억제, 그리고 재활용이 확실히 정착된 후에 소각에 필요한 쓰레기 양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최소 규모의 소각장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은, 현재와 같이 똑같은 상황과 자료에서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는 양측

의 의견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다. 행정 당국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는 명제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민과의 대화’는 이미 결정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는 향후 우리나라 쓰레기 정책 전반을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라는 전 지구적 요구에 맞는 길로 이끌수도 있고, 거스르는 길로 가게 할 수도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

쓰레기 문제의 한 당사자로서, 온 국민은 구매에서 폐기에 이르는 생활 전반에서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될 수 있는 한 적게 만드는 습관을 실천해 나가는 한편 쓰레기 처리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

〈필자=여성민우회 노원·도봉 지회 회원〉